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(안 제6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재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때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엄격한 대주주요건 요구 (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 등)

- 그러나, 은행 등은 인·허가시 엄격한 대주주요건·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과 타 법령과의 형평성* 등을 종합 고려하여, 겸영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**

* (자본시장법)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추가할 경우 전업금융투자업자 대비 완화된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

** '20.12.10일, 디지털금융협의회 규제개선 과제 및 '20.11.30일 규제입증위 개선과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은행 등이 겸영으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 허가 대비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은행 등 겸영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타 법령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 형평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금융소비자 보호 (안 제7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최근 “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,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” 방식의 구독경제가 활성화
 - 그러나, 구독경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료이벤트 후 유료전환 시 안내가 미흡하거나, 해지 또는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
-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대부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으로서 정기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,
 -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는 결제대행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는 없음
- 정부는 “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”(‘20.12.3일)을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과정에서 유료전환, 해지,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확립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,
 - 그 일환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의 거래 조건(거래내용, 금액, 대금결제일, 유료전환, 계약 해제·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)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요구하고, 이러한 거래 조건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,
 - 하위가맹점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분쟁 등 다수 발생시 시정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 및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무료이벤트 후 유료 전환 일정을 고지받지 못해 부당하게 결제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 - 정기결제 계약 해지를 방해받거나 환불 선택권을 제한받는 등 부당하게 권익이 제한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 확대(안 제19조의21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은 신용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시 ‘14일 이내’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‘7일 이내’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규제정비가 필요*

* '20.11.30일, 규제입증위원회의 규제정비 개선 권고 과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 보고기한을 ‘7일 이내’에서 ‘14일 이내’로 확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타 법령과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변경시 보고의무 기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4.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위탁사항 규정(안 제23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감독원장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일부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,
 - 문언상 업무 범위가 ‘등록 신청 수리, 등록 여부 통보, 등록말소 접수’ 등 절차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
 - 실제로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이 실질적인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을 심사 또는 확인하기 위한 위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부가통신업자의 ‘등록 요건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 확인’ 등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등록 관련 업무 절차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절차 효율성도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